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2. 4. 6.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4월 6일(수) 14:00~18:38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송 창 영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2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226호(2021)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57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前경영진에 의해서 발행되거나 유통됐던 전환사채 누락 부분을 말씀드리면 회사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전환사채에 기한 회생채권 전부에 대해서 법적성격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되어 회사가 사용자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었으며, 전환사채 본지에 따른 상환의무를 진다거나 전환의무를 진다는 것이 아니었음. 회사는 이 법원 판결 등을 통해서 손해배상의무의 종류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부채로 인식을 하였고, 이런 회계처리가 충당부채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담보취득 212억 원의 경우 법리상 전환사채의 중복발행 자체에도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전환사채 취득에 관한 계약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않음. 前경영진의 고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담보취득 부분 212억 원은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회사로서는 전환사채에 기한 채권들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 전환사채채권의 존부나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회사가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한 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도 없었음. 그 결과 충당부채인식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충족할 수 없고 손해배상채권의 성격을 가진 전환사채에 기한 채권에 대해서 법원판결 등으로 존부나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우발부채로 주식 공시하였음. 마지막으로 동일한 前경영진 위법행위로 인해 이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 주권거래 정지됐다가 상장유지 결정을 받았음. 지금 회계처리가 그 당시에 잘못됐다는 이유로 검찰통보에 이르게 되면 다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되며, 거래정지를 당하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투자자들이나 납품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됨.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검찰통보 조치를 유보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이 담보채권을 왜 해당 시점의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前경영진이 처음부터 자금을 횡령할 의도와 계획으로 허위 전환사채권을 담보 제공한 사항이기 때문에 前경영진이 허위 전환사채 발행시점부터 회사에 지금 청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함.

▶ (진술인) 횡령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발행되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님.

○ (위원) 횡령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금액의 추정은 불가하나 우발부채로 재무제표 공시를 하셨는지?

▶ (진술인) 재무제표 주식에 전환사채로 인해 우발부채가 있을 수 있다고 공시했음.

- (보고자) 정상채권과 허위채권을 포함해서 법원에서 확정된 채권이 462억 원인데 그 중 약 91.5%에 해당하는 채권이 2019년 2월17일까지 확정이 되었음. 2019년 2월17일은 2018년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날인데 2018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채무가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2018년 말까지 확정판결을 내린 부분만 회계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액에 대해서 회사 경영자나 담장자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경영자는 도주한 상태였고 회사 담당자들은 거의 다 퇴사한 상태여서 회사 측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힘들었으며 회생채권에 대한 법원 판결 금액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판결금액도 회생채권에 신고된 금액의 약 50% 정도만 인정된 상태이고 위약금이 많아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었음. 그리고 이사회 의사록이나 회사 자금 유·출입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발행한 채권의 경우에는 이미 재무제표에 계상된 상태였으며, 추가적인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취한 감사절차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0에 의한 우발채무라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하게 되었음.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증선위 검찰고발·통보 판단기준에서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논거를 종합해볼 때 제재 양정 (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검찰고발을 저는 검찰통보 정도로 1단계 하향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임.
- (위원) 93억 원을 2017년 재무제표 부채로 반영해서 정정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 (보고자) 정확한 것은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우선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양정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음.
- (위원) 검찰고발·통보 판단기준을 논의할 때 제재시점에 회계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지의 여부가 있었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됨. 또, 경영진의 교체 자체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전·후 경영진 간의 이면의 연계성 같은 것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워서 전체 양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발 자체를 정보사항 제공으로 함이 어떨까 함.
- (참여자) 주범이 현재 도주 상태에 있고 회사가 2018년도에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감리 착수 전에 자체적으로 형사고발까지 이미 했고, 회생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인수를 해서 들어온 경영진으로 보이고, 지금 고발통보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바로 강제집행 등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업무정보 송부로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임.

- (위원장) 제57호 안전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조치 중 검찰 고발 대신에 검찰에 업무정보를 송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조치하시기 바람. 한 가지 첨언하면 해당 사안의 핵심 관련자의 신병이 확보 된다는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업무정보 송부로 같음은 하 되, 고의 정보를 고발하는 수준으로 검찰에 자료제공(업무정보 송부)하면 좋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58호 『(주)이엠따블유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59호 『(주)에이블씨엔씨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

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0호 『(주)안다자산운용의 분할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1호 『에셋원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씨가 ‘최대주주의 사실상 지배자’인지?

- (보고자) 지배구조상에 있어서 *~*~*가 사실상 △△△△△
(주)과 ◇◇◇◇◇(주)을 지배한다고 판단했음.

○ (위원) 공모펀드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에셋원자산운용(주)
은 어떻게 1년 동안 2배나 늘었는지?

- (보고자) 공모증권펀드에 대해서 수탁고를 많이 증가시켰음.

○ (위원) 이 회사 재무현황이 2021년도에 굉장히 좋은데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

- (보고자) 과거에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면서 기존의 대부업을 정리하기로 했음.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의 수요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수행하다 보니까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2호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결국에는 환혜지를 종료 안 했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종료를 해서 펀드의 수익을 지킨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됨. 이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 (보고자) 환혜지 만기 전에 임의로 종료하려면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규약에 명확하게 되어 있음. 환혜지가 중요한 상품이다 보니까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명백히 되어 있어서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어쩔

든 형식적으로는 규약위반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펀드 수익을 지킨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경감을 한 과태료 부과안임.

○ (위원) 환혜지를 임의 종료할 때 이것이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용사가 검토를 하거나 판단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 (보고자) 2020년 4월8일에 환매중단 통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스왑은행과 협의를 했었음.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아지는 시점에 조기청산하게 된 것임.

○ (위원) 결과적으로 좋아졌다는 판단 외에 그 당시에 그런 의사결정을 할 무렵에도 펀드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판단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 (보고자) 규약을 위반한 것은 맞음. 수익자 전원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위반한 것을 지적하는 것임. 회사도 환혜지 비율을 조기청산할 때 수익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음.

○ (위원) 만약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려고 했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지?

- (보고자) 환매중단 통지서를 수취한 것이 2020년 4월8일이고 환혜지 조기종료된 것이 9월28일임. 중간에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노력을 했었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고 보임.

- (위원) 정리하자면 ‘환헤지가 이 펀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펀드에 이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의종료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수익자 전원에 대해서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몇 주 정도면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동기를 ‘중’으로 하고, 결과를 ‘경미’로 한 것이 최대한 감경한 것인지?

- (보고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최대 감경이라고 할 수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3호 『(주)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4호 『부산은행(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5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사실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당일에 각 종목을 200만 원씩 5개를 매수했었는데 이것을 매도하는 중에 하나 빠진 것을 제가 확인했음. 그래서 제가 감찰실에 바로 자진신고를 했었고 감찰실로부터 재발시 엄정조치 예정임을 서면경고를 받았음. 아래 사항을 고려해서서 과태료 부과 면제를 부탁드립니다만, 만약 면제가 어렵다면 제가 행동했던 미입력 사실이 과연 민법이나 형법이나 「공무원징계업무편람」에 있는 중과실인지에 대해서만 한 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음. 단순한 입력실수 이외의 고의, 중과실은 없고 과태료 부과에서 기준이 되는 각종 판단기준 중에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는 사소한 부주의이고, 이미 감찰실로부터 향후에 또 있으면 바로 제재를 받을 수 있

는 서면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면제나 감경사유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함. 이런 1건의 누락실수가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제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만 살펴봐주시기 바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이번에 상정된 안건을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으로 기간이 다양한데 이유가 무엇인지?

- (보고자) 이번에 상정된 건은 2020년 4분기, 2021년 1분기, 2020년 특별점검, 이렇게 3건 에서 발견된 건을 상정하기는 하였으나, 과거 신고분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자진신고를 통해서 발견된 부분이 있음. 휴직기간에 거래한 내용을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복귀 후에 신고하여 거래일자가 과거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음.

○ (위원) ○○○씨는 2017년에 한 것을 왜 굳이 지금 자진신고를 하셨는지?

- (보고자) 2017년 입사 이후 거래신고 규정을 잘 인지하지 못하셨던 것을 본인이 알게 되어서 신고하였음.

○ (위원) 휴직기간 중에도 1증권사 1계좌만 허용되는 조항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신고 유예를 할 수가 있으나 규정은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 휴직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금액도 거액이고, 매매일수도 91일이나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 (보고자) 이분께서는 조금 특이한 사례로 휴직기간이 4년 반에 달함.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복귀를 하면서 신고를 하게 된 사례로 과거 사례와는 좀 차이가 있음.
- (위원) 위반동기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일한 사유일 것 같은데 그것을 '중'과 '하'로 구분을 하는 명백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2017년 10월에 검사제재규정이 개정된 이후로 위반동기를 상·중·하로 구분하면서 그 이후로 발생한 건이 2건이 더 있습니다라는 과거에도 위반동기를 '중'으로 보아서 조치를 해왔었음. 그리고 금융투자상품 신고는 직원들이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분기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신고대상이나 방법 같은 것은 잘 숙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본인이 제대로 대조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리고 이런 건들이 일개 개인의 경미한 위반으로 사실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위반을 몇몇 직원이 계속 해서 범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기관 전체에 위반 건수가 누적되어 대외이미지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음. 이런 누락 건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과실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신고 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신고를 했

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음.

○ (위원) 증권사나 다른 곳과 비교해서 징계 수준이 어떤지?

- (보고자)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음. 다만, 증권사는 내부통제에 의해서 대부분 자동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부주의에 따른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 (위원) 그러면 금감원도 자동신고 하도록 하면 안 되는지?

- (보고자) 임직원이 다양한 증권사를 이용하기에 저희가 시스템에서 직접 데이터를 불러올 수 없어서 개별적으로 직접 신고를 하다 보니 이러한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개인의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음.

- (보고자) 자본시장과장임.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2017년에 입사한 ○○○씨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감사실에 물어봤고, 그전에 산 것을 파는 것은 문제없다고 본인은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신 것인지, 두 번째는 감사실에서 적발된 것은 아니고 금감원을 다니면서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한 다음에 자진신고를 해서 자진신고에 포함되어서 된 것인지, 그래서 만약 그 두 가지 조건에 다 해당이 된다고 하면 사실 감사대상기간이 아닌 쪽에 있었던 위반행위를 본인 스스로 자진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

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음.

- (보고자) 당시에 감찰실에 방문하여 입사 전부터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데 제약이 있는지를 물었고, 매도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고 답변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이해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음. 작년 4월에 뒤늦게 규정을 인지하고 자진신고하였으며 자진신고로 저희도 인지하게 되었던 것임.
- (보고자) 처음에 자기가 오인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나서는 감사기간이 지났음에도 자진신고를 한 것이 기록이 남는다는 면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함.
- (보고자) 법적용을 함에 있어서 건별로 예외를 두기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임.
- (위원) 유상증자 1건을 모르고 놓쳤거나 혹은 매매사실 1건을 모르고 놓쳤다는 것은 하루 이틀 지적하고 제재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동일한 이유로 제재를 하고 동일한 이유로 위반동기를 ‘중’으로 의율한 그런 사례들이 선례가 많이 쌓여있을 것 같음. 이미 선례가 쌓여있고 그런 이유로 제재를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만 특별히 안타깝다고 봐줄 수 없는 것이고, 이는 금감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당국 직원으로서 아무리 사소한 것도 신경을 쓰고 지켜야 시장에도 얘기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음. 그런데 ○○○○ 사례는 선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음. 혹시 이런 선례가 있었는지?

- (보고자) 없음.

- (위원) 이것은 정말로 선례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선례를 다시 한 번 조사해보시기 바람. 거의 유사한 조건 하에서 제재를 받은 선례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최초사례라고 하면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음.

- (보고자)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음.

- (위원장) ○○○○에 대한 제재조치안을 제외한 나머지 제65호 안건에 대해서만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관련해서는 나머지 조치 대상자들과 분리하여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16시47분 정회)

(17시07분 속개)

- 의결안건 제66호 『○○○○(주) 및 ○○○○○○○(주)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67호 『○○○○○○(주) 및 ○○○○○○○(주)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68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69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안』을 일괄상정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과징금 부과 처분 기준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도
개선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부과비율을 적용시켜 주셨으
면 하는 것이 저희의 주된 요지임.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금감원에서는 당사가 신탁업자를 통하여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
모규제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음. 그러나 애초에 당사
는 DLS에 대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았음. 당사는 특정금
전신탁계약의 설정이나 판매 등 투자자와 접점이 있는 그
어떤 단계에도 일체 관여한 바가 없었음. 설사 DLS가 특
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것이 모집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
도 당사는 DLS의 발행계약서에 투자자가 50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기재함으로써 법령상 또는 정책상
요구되는 전매제한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공모규제
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조치는 모두 준수하였
다고 생각함. 기존에 공모규제 회피에 관한 타사의 제재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로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고 거래를

주도한 회사가 제재된 사례들뿐인데 단순히 DLS 발행사로서 신탁업자와 그 어떤 공모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소정의 DLS 발행수수료만을 수취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할 유인도 없었던 당사가 약 XX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 조치에 취해진다는 것은 과거 전례에 비추어 너무 과중한 처벌임.

- (위원) 환헤지 차원에서 신탁업자가 요청을 하여 DLS를 발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이 특정금전신탁이 헤리티지펀드의 수익에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주)가 직접 싱가포르 헤리티지 펀드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도 있었습니지만 그 헤리티지 펀드는 유로화 표시로 환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어 환헤지를 해서 투자자들에게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주)에서 설계를 해서 ○○○○○○(주)의 요청에 따라서 DLS를 발행했음. 원래는 ○○○○○○(주), □□□□□(주)에게 기초자산과 발행금액, 시기 등을 특정해서 DLS 발행을 요청해 왔었던 것임.

- (위원) 특금 설정이나 투자권유는 다 ○○○○○○(주)에서 한 것라는 말씀인지?

▶ (진술인) 그러함. 이 사건에서 ○○○○○○(주)은 펀드운용사도 아니고 펀드의 판매회사도 아님.

○ (위원) ○○○○○○(주)과 ○○○○○○(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주)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금감원 의견은 어떠한지?

- (보고자) 저희가 제출드린 자료를 보시면 “49인 이슈 컨트롤은 잘 하고 있는거지?” 그러면 ○○○○○○(주) 같은 경우에는 “회차마다는 해.” 그러면 ○○○○○○(주)는 “괜찮겠어? 49/ 49/ 49로 나가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분할 발행 요청하고 회차별 50인 이하로 맞추는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음.

○ (위원) ○○○○○○(주) 쪽에서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49/ 49/ 49’를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과징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고의와 중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금감원 측의 얘기에 의하더라도 당연한 것 아니냐는 주장 이외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저희는 ○○○○○○(주) 1인에 대해서만 발행을 했기 때문에 모집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간주모집이라면 저희는 전매제한조치를 다 취했음. 결과적으로 50인이 넘는지의 여부는 ○○○○○○(주)에서 확인했었어야 될 일이지, ○○○○○○(주) 측에서 확인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됨.

▶ (진술인) 법률대리인임. ‘49/ 49/ 49인’에 관해서는 ○○○○○○(주) 직원이 ○○○○○○(주) 직원에게 묻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와 확인 책임이 ○○○○○○(주)에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물었을 뿐이지, 실제 투자자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그중에 실제 투자권유를 한 투자자, 그다음에 전문투자자, 연고자 이런 분들이 몇 명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음.

- (위원) 진술인의 요지는 특정금전신탁업자 한 사람한테만 팔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간주모집이 되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전매제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간주모집이 아니다, 또 설령 특정금융신탁(이하 '특금'이라함) 수익증권이 문제가 된다면, 수탁자에게 문제가 된다면 그 모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 (진술인) 맞음. 기본적으로 판매행위, 체결 권유하는 것은 ○○○○○○(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은 그 사정을 알 수가 없음.

- (위원) 사전에 특금 설정하기 전에 특금에 편입될 자산이 DLS인데 발행사와는 그와 관련해서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발행해서 주기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이지?

▶ (진술인) 그러함.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세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먼저, 당사가 주선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주선인은 발행인을 위해서 증권을 모집하거나 모집을 분담하는 자를 말함. 그런데 당사는 단순한 판매사이지, 발행인을 위해 증권을 모집한 것이 아님. 발행인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실사 등 주선인으로 평가될만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없음. 설령 본 건에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시더라도 이것은 발행사가 부담하는 의무이지, 판매사인 당사가 부담할 의무는 아님. 당사로서는 발행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판매한 것임. 그런데 발행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판매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함. ☒☒☒☒ 사례와 ○○○○○○○ 사례에서 그동안 금융당국이 발행사에게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책임을 물었던 것과 달리 발행사가 아닌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었음. 하지만 해당 사안은 본 건과 사안이 전혀 다름. ☒☒☒☒ 사례의 경우에는 영세한 발행사를 내세워서 OEM형식으로 판매한 것임. 본 건에서는 당사가 발행사의 발행을 문의하기도 전에 이미 발행사가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음. 본 건은 국내 유수의 발행사인 ○○○○○(주)과 ○○○○○○○(주)이 자신들의 판단 하에 정상적으로 발행한 건들임. 이러한 점을 보시더라도 당사에 증권신고서 미제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

○ (위원) ○○○○○○○(주)가 판매한 것이 특정금전신탁인지 DLS인지?

▶ (진술인) 특전금전신탁임.

▷ 세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네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이 3건을 블라인드 펀드에 따라서 한 투자라고 봤기 때문에 각 건의 담보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것이 동일한 펀드라고 예측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저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없으므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네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다섯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2건의 사모펀드 모두가 문제없이 고객에게 원리금이 상환되었고, 최초 설정 이후에 해당 운용사와 운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자체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서 추가적인 판매를 하지 않았음.

▶ (진술인) 그 당시 규정상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개별부동산하고 매칭(matching)되는 구조라면 동일한 증권이라는 논란은 완전히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라고 내부적인 판단을 했음. 앞서 저희 담당임원께서 말씀드렸드시피 저희는 추가판매를 하지 않았음. 추가판매를 안 했던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별 매칭

(matching)된 부동산 담보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니 등기부등본을 저희한테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음. 처음에는 자금 집행이 되어야 그것을 해 줄 수 있으니 한 3개월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도 싱가포르 핑계, 독일 핑계를 대면서 저희한테 제출을 못했음. 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게 되었음. 최초에 가입했던 두 건의 펀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아 고객분들한테 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 드렸음. 그 이후에는 추가판매가 없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그다음에 펀드판매사와 금융위에서 규정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주선인 부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림. 펀드의 판매사는 사실 펀드상품을 제조하는 운용사에서 제조한 상품을 단순히 고객한테 설명하고 기준가를 안내하는 등의 실무적인 행위만 하는 지위에 있음. 반면 주선인은 발행자의 발행사무나 이런 부분을 상당부분 대리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주선인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은 주로 IB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개입과 간섭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펀드판매사의 경우를 주선인의 규정과 관련해서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임.

- (위원) ○○○○○○○○○○○○○○○○○(주)이 발행한 독일헤리티지 펀드 건에 대해서 □□□□□(주)이 이 펀드의 설정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하셨는지?

▶ (진술인) 그 펀드를 제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

- (보고자) ○○○○○(주)에서 설명하시는 것은 펀드라는 상품을 본인은 판매사로서 팔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의 운용자를 발행인으로 보고 펀드를 설정하고 설정한 것을 팔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상품을 설명해 주고 팔아줄 사람을 찾아달라는 행위를 부탁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판매를 담당하는 금융회사가 하는 역할임. 원래 주선행위는 사겠느냐고 물어보는 행위까지이고, 사겠다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 투자자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영업행위 절차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판매행위로서 두 개가 서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그 상품을 투자자에게 설명을 하고 사도록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모집행위의 일부를 담당했다는 것임. 따라서 저희는 주선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고 주선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선인이라고 보고 있음.

▶ (진술인) 금감원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발행사의 사무에 저희가 관여한 바가 없고 발행사의 과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의문임. 판매사에 대해서 이번 과징금 사전부과조치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임. 금감원의 입장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님.

▷ 다섯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여섯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희는 펀드판매사로서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음. 펀드판매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펀드의 설정 과정에 있어서 개입을 하게 되면 예전 자본시장법상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것은 OEM펀드로서 자본시장법이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음. 그래서 자본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증권 발행에 있어서 주선인에 대한 책임 부분이 펀드판매회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주선인과 펀드판매회사의 역할이나 지위를 무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저희가 2017년도에 단순 펀드판매회사로서 펀드를 판매했고 이 부분이 만약에 49인을 초과해서 판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펀드판매회사로서의 책임과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으로서의 책임 부분은 분리되어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임.

○ (위원) 금감원은 ☐☐☐☐☐(주)한테 왜 주선인으로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은 그것을 들어보시고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람.

- (보고자) 현재 자본시장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선인은 발행인 또는 매출인이 발행한 새로운 증권에 대해서 투자자를 상대로 청약 권유를 한 행위자로 되어 있음. 현행 자본시장법상에서는 펀드를 발행한 자산운용사를 발행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을 투자자 상대로 광고하고 설명한 다음에 투자자한테 “이 증권에 투자하시겠습니까?”하고 물어보는 행위까지가 주선이고, 거기에 대해 본

인이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자가 결정한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영업행위 절차에 따르는 행위는 판매행위임. 따라서 ○○○○○(주)에서 투자자를 상대로 한 행위는 주선의 행위이고 주선행위를 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선인이라고 판단했음.

- ▶ (진술인) 형식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주선인으로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판매행위가 주선행위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달리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됨.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증권신고서 제출의 무에 처음에는 인수인만 있다가 주선인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연혁적인 부분이나 법의 취지를 따져봤을 때 주선인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인수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했던 것인데, 과연 펀드판매회사한테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임.

▷ 여섯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장)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음. DLS에 대한 별도의 조치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반증권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실질이 유사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과징금 부과액을 감액하여 DLS발행인 ○○○○○(주)에 대하여 77,300,000원을, ○○○○○○○(주)에 대하여 417,800,000원을 각각 부과하고 주선인 ○○○○○○○(주)에 대

하여는 총 495,100,000원을 부과하겠음. 금융위 소관과는 본 건 과징금 감액 취지를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도 일반증권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주시기 바람. 또한, 본 사안은 주선인인 ○○○○○○(주)가 제반 DLS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발행조건 협의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선인”에 대한 과징금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발행인”에 대한 과징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에 따라 ○○○○○○(주)에 대하여도 발행인과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제재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금융위 소관과는 향후 본 사안과 같이 위법행위 발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선인에 대하여도 위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보다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선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람. 다음 제68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 및 제69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음. 주선인 해당 여부에 대하여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제68호와 제69호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증선위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제66호, 제67호) 및 보류(제68호, 제69호)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제66호, 제67호) 및 보류(제68호, 제69호)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8시 38분 폐회)